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

금 재 호\*

급속한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측면에서도 청신호가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의 경우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8만 6천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고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가시권에 다가온 것은 아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2008~09년의 2년 동안 생산가능인구가 무려 92만 2천 명이나 증가하였지만, 취업자는 불과 7만 3천 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생산가능인구가 50만 명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률이 2007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7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성되어야 하며, 58만 6천 명이라는 기록적 증가에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다. 과거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위험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할 때 흔히 들리는 주장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뒷받침 없이 서비스산업의 성장도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조업의 고용탄력성<sup>1)</sup>이 마이너스(-)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성장은 직·간접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도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두 산업의 균형발진이 중요하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하나의 동일한 그룹(homogeneous group)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한다. 2009년의 경우 서비스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76.6%를 고용하고 있었다. 취업자의 3/4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의견은 상당히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주장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um@kli.re.kr).

1) 고용탄력성=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산업의 부가가치증가율).

이를 위해 먼저 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거나, 아니면 OECD의 사례처럼<sup>2)</sup> 한국의 고용환경에 적합한 새 분류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표준산업분류로는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에 역부족이다.

새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하나의 제언으로 수출 가능성 및 수출비중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보다 내수에 의존하는 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의 팽창이 없는 경우 고용창출이 쉽지 않다.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또는 임금) 저하나 국민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의 증가를 수반한다. 그 결과 고용창출은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하거나 또는 소비자 실질효용을 하락시킬 위험성이 높다. 도소매 등 유통업과 레저산업, 교육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나치게 비대한 유통업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높여 효용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과거의 경험은 잘 말해주고 있다.

내수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생산성 증대와 고용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반면, 수출 가능성이나 수출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증대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용이하다. 문제는 건설, 해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해외진출에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선점하고 있는 금융, 의료, 법률 등의 분야 진출은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다소 성급한 기대이다.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여 왔으나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진 결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2008년의 경우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54.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상대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은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서비스산업을 하나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고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범위한 용어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각각의 세부 산업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출발점은 새 분류체계의 구축이다. **KLI**

2) 또한 OECD에서는 서비스산업을 크게 건설업, 개인(individual)서비스업, 기업(entrepreneurial)서비스업, 공공(public)서비스업 및 분배(distributive)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